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서의 루머와 확증편향*

박 휘 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hrpark5502@hanmail.net)

-
- I. 서 론
 - II. 선동루머와 확증편향에 관한 이론
 - III. 사드 배치 논란의 경과와 쟁점
 - IV. 사드관련 쟁점의 루머 여부 분석
 - V. 결론 및 함의
-

요 약

본 논문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루머와 확증편향에 의하여 전개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관련 논란을 정리하고, 핵심적인 쟁점을 분석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러한 논란이 언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루머와 확증편향의 영향이 컸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제 우리는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전개된 논란이 루머와 확증편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 국민 모두가 반성의 차원에서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최선의 탄도미사일 방어개념을 정립한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의 탄도미사일 방어력과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력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미흡한 부분은 한국군이 적극적으로 보완함으로써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하더라도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사드와 관련된 논란에서 드러난 교훈을 참고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지니는 한계를 냉철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드, 미사일 방어, MD, BMD, 루머, 확증편향, 한미동맹

* 2016년 1월 3일 접수, 수정(2016.3.6) 후, 게재확정(2016.3.9)

I. 서론

북한은 2016년 1월 6일 추가적인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016년 2월 7일에는 인공위성이라면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여 유사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그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의 핵전력이 계속 증강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후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정도로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언제든 핵미사일(핵무기를 탄두로 탑재한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할 상황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한 6자회담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력을 갖추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deter)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북한의 선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의 대규모 핵전력을 통하여 응징보복하겠다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억제 개념은 북한이 오판하거나 공멸을 각오해버릴 경우에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취약점이 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할 것이라는 명백한 징후가 있을 경우에 선제타격(preemptive strike)하거나 실제로 발사되었더라도 공중에서 요격(interception)하는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의 방어대책이 필요해지고, 한국군은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로 그의 구현을 위한 능력을 구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탄도미사일 방어(BMD)¹⁾는 항공기에 대한 요격개념을 개념을 상대 탄도미사일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성공률만 확실하면 가장 신뢰성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의 비행속도가 워낙 빨라서(마하 5-20) 요격하는 것이 쉽지 않고,

1) 한국에서는 부시 행정부 때 잠시 사용한 MD라는 약어를 계속 사용하지만,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약어는 BMD이다.

핵미사일의 경우 몸체를 직격파괴(hit-to-kill)하지 않으면 여전히 큰 피해를 끼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중첩방어(multi-layered defense)의 개념을 적용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자국군대 보호를 위한 전구미사일방어(TMD: Theater Missile Defense)의 경우 부스트단계(boost phase defense), 하층방어(lower-tier defense),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로 조직하고 있다. 미국은 한때 레이저로 부스트단계에 있는 적 미사일을 파괴시키는 개념을 추진하였으나 현실성이 적어서 거의 포기한 상태이고, 하층방어를 위해서는 PAC-3 요격미사일, 상층방어를 위해서는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요격미사일을 개발하여 배치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하층방어를 위한 PAC-3 요격미사일은 2개 대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상층방어를 위한 요격미사일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4km의 비무장지대로 이격된 북한에서 발사되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은 비행고도가 낮아서 PAC-3를 통한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PAC-3의 요격률이 완벽하지 않아서 상층방어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1,300km의 사거리이면서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미사일을 고(高)탄도(lofted trajectory)로 비행시킴으로써 사거리를 줄여서 한국을 공격할 경우 마하7 정도의 고속으로 급강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PAC-3로는 요격이 쉽지 않다. 실제로 북한은 2014년 3월 노동미사일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발사하여 650km만 비행시킨 시험을 실시한 적이 있다.²⁾ 따라서 미군은 사드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본국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사실을 스키퍼로티(Curtis Scaparatti) 한미연합사령관이 2014년 6월 3일 한국 국방연구원이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공개하게 되었다.³⁾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가볍게 언급한 스키퍼로티 사령관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 예상외의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일부 시민단체들은 사드가 중국이 핵억제전략 차원에서 미국을 공격해야만 할 때 그것을 요

2) 홍규덕,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 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세아』, 제22권 4호 (2015), p. 123.

3) 『조선일보』 (2014. 6. 4), p. A1.

격할 수 있는 무기이고, 그것이 한국이 배치되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심각한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대두되었고,⁴⁾ 그리하여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론리가 삼시간에 언론과 국민들에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김진명은 『싸드(THAAD)』라는 소설을 출간하였는데,⁵⁾ 이것 또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국민들에게 읽혀졌고, 이후 한국사회는 사드 배치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로 분열되고 말았다. 이러한 논란을 고려하여 가급적 침묵하던 정부는 북한이 2016년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하자 미군과 사드배치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언급하였고, 또다시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어 한미 양국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주한미군이 첨단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결국 한국의 방어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왜 유독 사드에 관해서는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고, 이렇게 오래 지속되고 있을까? 과연 사드 배치를 하면 중국의 핵억제전략이 무력화되는 것일까? 그 동안 드러난 바로는 사드는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하여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탄(ICBM)을 타격할 수 없고, 그 레이더도 1,000km 정도만 탐지할 수 있어 중국의 군사활동을 별로 탐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드에 대한 논란의 상당부분이 오해나 루머에 의하여 비롯된 것은 아닌가? 또한 수소폭탄 시험까지 실시하여 북한의 핵위협이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상태라면 당연히 사드 등을 배치하여 방어력을 증강해야할 것인데,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진정되지 않는 것은 한번 믿은 것을 계속 믿고자 하는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⁶⁾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란을 루머와 확증편향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드에 관한 논란이 루머와 확증편향의 산물이라면, 한국은 중요한 안보사안을 오해에 의하여 결정하는 셈이고, 이러한 것이 반복된다면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부를 파헤치는 것이어서 유쾌한 작업은 아

4) 정육식, “한국의 MD 편입은 ‘도자기 가게에서 쿡후하는 격’”, 『프레시안』 (2014. 6. 2).

5) 김진명, 『싸드(THAAD)』, (서울: 새움, 2014).

6) 자신이 주장하던 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난 이후에도 그것을 계속하여 믿고 싶어하는 경향을 말한다.

하지만,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분석에 착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루머와 확증편향에 관한 이론부터 정리하여 소개한 다음, 사드 논란이 전개되어온 경과를 설명한 후,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현대에는 루머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서도 확산되지만,⁷⁾ 이 경우 분석을 위한 내용을 종합하거나 추적하는 것이 어렵고, 텔레비전 보도의 경우에는 글로 남아 있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서 일간지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한 분석으로도 충분한 유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II. 선동루머와 확증편향에 관한 이론

1. 루머

일반적으로 어떤 불확실한 사실이 유포되는 것을 소문 또는 가십(gossip)이라고 말하고, 악의성이나 유해성이 커지면 유언비어(流言蜚語) 또는 루머(rumor)라고 말한다.⁸⁾ 루머는 “전과 당시 진위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정보”⁹⁾ 중에서 악의성이 큰 것이다. 루머는 사람의 몸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는 것과 유사한 “마음의 감염”(infection of the mind)으로서, 전염병과 유사하게 확산된다.¹⁰⁾

7) 이에 관해서는 차유리·나은영, “국내 인터넷 루머커뮤니케이션 유력자 현황에 대한 탐색: 동기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8권 4호 (2014년 8월), pp. 312-340; 홍주현·윤해진, “트위터를 통한 루머의 확산 과정 연구: 한미 FTA 관련 루머의 자극성에 따른 의견 확산 추이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6호(2014), pp. 59-86; 최영, “인터넷상에서의 루머 확산 저지에 관한 연구: 시민들의 자발적 대응효과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연구』, 제18권 3호 (2010), pp. 77-100.

8)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할 경우 2003년부터 지금까지 ‘루머’는 14편, ‘유언비어’는 17편이 발표된 것으로 나온다. <http://dl.nanet.go.kr/> (검색일: 2016. 1. 25)

9) 권세정, 차미영, “빅데이터 기반 루머의 특성 및 분류,” 『정보과학처리학회지』, 21권 3호 (2014. 5), p. 46.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루머는 존재하지만, 최근 한국에서는 안보와 관련해서도 루머가 발생하고, 상당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예를 들면,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가 한국의 군함인 천안함을 공격하여 격침 시킴으로써 해군병사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는데,¹¹⁾ 이 사건 직후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천안함이 남아서 좌초되었다거나 한국 정부가 고의로 격침시켰다거나 훈련 중이던 미 핵잠수함에 의하여 오폭 또는 충돌되었다라는 루머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이것은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유엔에까지 전달되어 결의안 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악의성이 적을 경우 루머는 정보를 전달하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¹²⁾ 아무런 정보가 없어 불안할 때 그것을 줄여주거나 최소한의 행동기준을 마련해주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로 기능하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악의성이 커질 경우 루머는 상당한 해악을 끼치고 그래서 서양에서는 루머폭탄(Rumor Bomb)이라는 용어도 생성되었다.¹⁴⁾ 루머폭탄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자 고의적으로 루머를 퍼뜨리는 행태이고, 한국에서는 “악성 루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¹⁵⁾

루머는 대체적으로 입으로 전해졌으나 인터넷이 등장함으로써 현대에는 글로써 전달되는 사례가 증대되고 있다. 인터넷이 중심이 되는 현 소통수단의 대부분은 음성이나 글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하여 집단적으로 신속히 유포되기 때문에 현대의 루머는 조기에 신념화되거나 내면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루머를 유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나중에는 해당 루머에 대한 태도와 동조 여부가

10) M. Nekovee et al, "Theory of rumor spreading in complex social networks," *Physica A* (July 9, 2008), p. 2.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2819843_Theory_of_rumour_spreading_in_complex_social_networks (검색일: 2016. 1. 15).

11) 천안함 폭침 원인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이다. 합동조사단 결과에 대한 요약은 국방부,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0), pp. 256-265.

12) 권세정·차미영 (2014), p. 46.

13) 최영 (2010), p. 80.

14) Jayson Harsin, "The Rumour Bomb: Theorising the Convergence of New and Old Trends in Mediated US Politics," *Southern Review: Communication, Politics & Culture*, Vol. 39, Issue 1 (2006), pp. 84-110.

15) 장혜지·조수영, “악성루머에 대한 사회적 동조, 대응방법, 루머이력이 기업평가 및 루머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7권 4호(2013), pp. 96-123.

내용의 진실성보다 더욱 중요시하게 된다.¹⁶⁾

2. 확증편향

루머는 그 특성상 그다지 오래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루머로 전파된 내용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지속되는 것은 확증편향이라는 효과로 인한 것이다. 확증편향은 “진리 여부가 불확실한 가설 혹은 믿음을 부적절하게 강화하는 행위”로서,¹⁷⁾ 한번 듣거나 믿은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확증편향에 빠지면 “기존 인식에 일치하거나 이전에 믿는 바와 모순되지 않는 방향으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거나 처리”하고,¹⁸⁾ “현재의 신념이나 대안(결과정보 포함)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주로 탐색”하게 된다.¹⁹⁾

확증편향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가 진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고, 진위와 상관없이 어떤 가설을 빈번하게 들으면 신념화하게 되며, 어떤 가설을 일단 수용해버린 상태에서는 매우 설득력있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그것을 진실로 보려하며, 가설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가설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해지고,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으며, 가설에 관한 토론이나 연구 등의 학습과정이 수반됨에 따라 가설에 대한 신뢰가 점점 강해진다.²⁰⁾ 따라서 처음 어떤 내용을 들은 상태에서 반대의 입장을 듣지 않은 채 시간이 경과할수록 확증편향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확증편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일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²¹⁾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을 경우 쉽게 없어지지 않고, 확증편향을 자신의 신념으로 오해할 개연성도 높다. 따라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강요하거나, 정확

16) 한정석, “인터넷괴담과 사실왜곡의 현상과 분석,” CFE Report No. 148 (2013년 3월 10일), p. 7.

17) Raymond S. Nickerson, “Confirmation bias: A ubiquitous phenomenon in many guis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2(2) (June 1998), p. 175.

18) Armen Allahverdyan and Aram Galstyan, “Opinion Dynamics with Confirmation Bias,” *PLOS ONE*, Vol 9 Issue 7 (2014), p. 1.

19) 이양구, “사후과잉확신편향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7호(2010), p. 255.

20) 이예경, “확증편향 극복을 위한 비판적 사고 중심 교육의 원리 탐구,” 『교육과학연구』, 제43권 4호(2012), p. 6.

21) 이예경(2012), p. 4.

하게 판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책임감을 부여하거나, 집단을 형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거나, 심리상태를 안정시키는 등의 의도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확증편향이 제거될 수 있다.²²⁾ 그래서 ‘악마의 변호인’(devil's advocate) 개념에서 보듯이 반대의견을 강제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등으로 확증편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의도적 장치를 강구하기도 한다.²³⁾ 개인에게 특정한 의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책임감(accountability)을 강화시키는 것도 확증편향을 감소시키는 데 유용한 것으로 추천되고 있다.²⁴⁾

이렇게 볼 때 어떤 잘못된 내용이 루머로 전파된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옳은 정보가 많아져서 균형을 이루면서 진실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확증편향으로 인하여 루머가 진실인 것으로 믿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사회적 오해는 루머로부터 시작하여 확증편향에 의하여 신념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새로운 루머가 계속 유입될 경우 확증편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Ⅲ. 사드 배치 논란의 경과와 쟁점

1.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의 경과

가. 배경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탄도미사일 방어를 둘러싼 논란의 연장선에서 야기되었다.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가 탄도미사일로 미군막사를 공격하여 30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목격한 이후 한국군은 미국이 개발한 요격미사일 구매를 검토할 정도로 탄도미사일의 방어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으나,²⁵⁾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자 소극적인 입장으로 변화되었

22) 이예경(2012), pp. 7-12.

23) 이양구(2010), p. 257.

24) 이양구(2010), p. 258

25) Kenneth W. Allen, et al., *Theater Missile Defen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orking Group Report, No. 34 (Washington D.C.: The Henry L. Stimson Center, June 2000). p. 34

다. 또한 탄도미사일방어를 위해서는 미군 전구미사일방어(TMD)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한국의 국력신장으로 자주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필요성을 부정하는 시각이 확산되고 말았다. 1999년 3월 5일 외신과의 회견에서 천용택 당시 국방장관은 “TMD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한국은 TMD에 참여할 경제력과 기술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고, 김대중 대통령도 1999년 5월 5일 CNN과의 회견에서 TMD 불참 입장을 확인하였다.²⁶⁾ 이후부터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방어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거나 드러난 사실만을 언급”하는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²⁷⁾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01년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체계인 NMD(National Missile Defense)와 TMD를 MD(Missile Defense)로 통합하여 'MD'(Missile Defense)라는 약칭을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일부 시민운동가들은 이것을 세계패권 장악의 시도로 해석하면서 참여 불가론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²⁸⁾ 미국의 'MD'에 참여하거나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할 경우 주변국을 자극하여 동북아시아의 긴장과 군비경쟁을 촉발하거나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할 수 있고, 탄도미사일 방어는 대규모 예산과 고도의 기술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²⁹⁾ 이러한 주장은 한국 사회에 확산되어 정부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였고, 따라서 2003년 국방부는 탄도미사일 방어의 핵심적 개념인 다층방어(multi-layered defense)를 포기한 채 종말단계(終末段階, terminal phase)의 상층방어(upper-tier defense)와 하층방어(lower-tier defense) 중에서 미국 MD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하층방어만 추진하게 되었다. 그래서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라는 용어를 제시하면서 “미 MD 참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었고,³⁰⁾ 이로써 한국의 탄도미사일방어는 잘못된 개념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26) 『동아일보』 (1999. 8. 15), p. A8.

27) 이상훈,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주변국 인식”, 『군사논단』, 통권 제46호(2006), pp. 153-154.

28) 정육식 (2003).

2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국 MD에 참여 규탄 기자회견문』 (2008. 3. 20).

30) 『조선일보』 (2003. 6. 11), p. A1. 당시 미국의 어떤 체제에 우리가 편입되는 등의 개념으로 ‘참여’라는 말을 사용하였으나, 미국이 어떤 체제를 구성한 후 한국이 일부분을 맡도록 요청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참여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용어이고, ‘협력’이어야 한다.

보수지향의 이명박 정부는 탄도미사일방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한국형’이라는 말에 구속되어 미국과 협력을 추진하거나 PAC-3 이상의 능력을 갖는 요격 미사일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조차 하지 못하였다. 하층방어의 경우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항공기 요격용으로 개발되어 직격파괴 능력이 없는 PAC-2 요격미사일 2개 대대를 구입하는데 그쳤다. 2011년 3월 8일 발표된 “국방개혁 307계획”에서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보강”은 “적 비대칭 위협 대비능력 강화”라는 과제 중의 소과제로 포함되었을 뿐이다.³¹⁾ 이 기간 동안 한국의 탄도미사일 관련 논의에서는 항상 “미 MD 참여” 여부가 질의되었고, 정부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해도 의심은 계속되었다. 급기야 2013년 10월 16일 김관진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요청하여 “우리는 분명히 미국 미사일방어(MD)에 가입하지 않는다...MD와 관련한 요청은 미측에서 일절 없었다”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³²⁾ “미 MD 참여 불가”라는 루머의 위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이후부터도 한국의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토론의 주제는 그 필요성이나 추진전략이 아니라 ‘미 MD 참여 여부’였고, 탄도미사일 방어에 관한 미측 인사의 발언은 대부분 ‘미 MD 참여 압박’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4년 5월 28일 (현지 시각) 제임스 윈펠드(James A. Winnefeld) 미 합참차장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TMD의 핵심인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³³⁾ ‘미 MD 참여’와 ‘사드배치 허용’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나. 스캐퍼로티 사령관과 워크 부장관의 발언

사드를 둘러싼 논란이 본격화된 계기는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언급이었다. 그는 2014년 6월 3일 웨스턴조선 호텔에서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주최의 조찬강연에서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개인적으로 (미국 군 당국에) 사드의 전개(배치)에 대한 요청을 한 바 있다...언론에선 현재 사전 조사 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31) 국방부, 『국방개혁 307계획 보도 참고자료』 (서울: 국방부, 2011), p. 23.

32) 전현석, “金국방 ‘분명히 美 MD에 참여 안해’”, 『조선일보』 (2013. 10. 17), p. A4.

33) 윤정호, “美 ‘아태지역 MD(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한국 참여 압박”, 『조선일보』 (2014. 5. 30), p. A1.

묘사했지만 그 정도라기보다는 한국에 사드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 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답하였다.³⁴⁾ 그러자 한국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나 군 고위 관계자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 추진을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면서³⁵⁾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미 MD에 참여는 결과가 되고, 그러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에서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반대 논리가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8월 경 이러한 논리 하에 쓰인 『싸드(THAAD)』라는 제목의 소설이 발간되어 읽히면서³⁶⁾ 위 논리에 대한 공감대는 급격히 확대되었다.

2014년 9월 30일 미국외교협회 간담회에서 로버트 워크(Rober Work) 미 국방부 장관이 사드의 배치 방안을 한국 정부와 협의 중(working out)이라고 밝힘으로써 또 한번 이 문제는 한국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는 "꿈에 배치된 미국의 사드 미사일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고...사드 배치가 맞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그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알고 있다. 하지만 사드는 전략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니라고 양국에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³⁷⁾

워크 장관의 발언이 공개되자 한국 언론에서는 국방부와 미국이 사드 배치에 관하여 협의한 바가 있으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정부를 공격하였다. 한민구 국방장관이 2014년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가용수단이 제한되는데 사드를 배치하면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지만,³⁸⁾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기보다는 침묵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또한 2014년 11월 26일 추귀홍(邱國洪) 주한

34) 유용원, “주한미군 '사드(THAAD·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추진... 中 반발 예상,” 『조선일보』 (2014. 6. 4), p. A1.

35) Ibid.

36) 이 소설을 시작하는 “작가의 말”에는 “싸드는 중국의 ICBM을 근거리에서 감시하는 것을 요체로 하고 있으며, 시스템에 변형을 가하면 요격도 가능한 강력한 방어체제다. 중국은 싸드가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대륙간탄도탄이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진명, 『싸드(THAAD)』, p. 7.

37) 윤정호, “美 국방부장관 ” THAAD(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 한국배치 검토 ” 『조선일보』 (2014. 10. 1), p. A1.

38) 『조선일보』 (2014년 10월 8일), p. A5.

중국대사가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남북관계발전특위)와의 간담회에서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0km라서...”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듯이³⁹⁾ 중국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다. 중국 국방부장 및 외교부장조리 방한

사드를 둘러싼 국내 논란은 방한한 중국 관리들이 그들의 부정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더욱 가열되었다. 2015년 2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 “중국군 수뇌부가 우리 군 수뇌부에게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되었듯이⁴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민구 국방장관은 “미측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거나 협의한 바가 없으며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차원”이라고 답변하였다.⁴¹⁾ 한국에서는 중국의 내정간섭적인 발언에 대하여 분개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지만, 사드 배치가 중국까지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문제라는 인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의) 요청, 협의, 결정이 없었다”는 소위 “3 No”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더욱 신중한 자세로 전환하였다.⁴²⁾

2015년 3월 한국을 방문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역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자신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언론에 공개하였다. 그는 “사드 문제에 관해 아주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고...중국 측 생각을 한국에 알려줬으며...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라고,...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하면 고맙겠다”고 언급하였고,⁴³⁾ 이에 대해 우리 측은 '3 No 입장'을 강조하면서 “사드 문제는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스스로 판

39) 추인영, “대북인권결의안 및 사드 한국배치 '반대',” 『뉴시스』 (2014년 11월 26일).

40) 유용원, “중국방 ” 주한미군에 '사드(美 高고도 요격미사일)' 배치 우려”, 『조선일보』 (2015년 2월 5일), p. A6.

41) Ibid., p. A6.

42) 정운섭, “靑 사드 공론화에 부정적...‘3No’ 입장 재확인,” 『연합뉴스』 (2014년 3월 11일).

43) 이용수, “中 ‘韓 사드(THAAD·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우려’ 공개적 압박”, 『조선일보』 (2015년 3월 17일), p. A1.

단해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⁴⁴⁾ 중국의 관리들이 이와 같이 언급한 것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고,⁴⁵⁾ 이로써 사드 배치에 관한 논란은 국제정치적인 비중을 갖게 되었다.

라. 카터 미 국방장관 등의 방한

2015년 3월 하순 뎀프시(Martin E. Dempsey)미 합참의장, 4월 중순 카터(Asheton Carter) 미 국방장관, 5월 중순 케리(John Kerry) 미 국무장관 등이 차례로 한국을 방문하였는데, 그들의 방한계획이 소개될 때마다 한국의 언론에서는 사드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논란을 가열시켰다. 그러나 뎀프시 합참의장은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체계”(IAMD: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를 논의하였고,⁴⁶⁾ 카터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진전됐다면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키는 등 사드는 거론하지 않았다.⁴⁷⁾ 다만, 케리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장병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위협과 관련)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하고...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병력·함정 배치 등)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언급하였다는 사항이 공개되자 언론에서는 이것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 언급으로 해석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하였다.⁴⁸⁾

마.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경과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실시하여 수소폭탄의 개발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자 다수의 인사들이 다양한 토론장에서 사드의 배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야당에서도 “북한 핵무장에 가장 좋은 대비책은 미국이 한국에

44) Ibid., p. A1.

45) Ibid., p. A1.

46) 양승식, “통합 미사일 방어망... 韓美 합참의장 논의, 내달 美국방 방한때 ‘사드’ 제기 가능성”, 『조선일보』 (2015년 3월 28일), p. A1.

47) 유용원·최재혁, “美국방 ” 사드(高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생산단계... 배치 논의할 때 아니다”, 『조선일보』 (2015년 4월 11일), p. A6.

48) 양승식, “케리 美국무, 사드 한국 배치 필요성 언급, ‘北 도발적... 모든 것에 대비해야’”, 『조선일보』 (2015년 5월 19일), p. A1.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사드 배치를) 주저한 것은 중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인데,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 자위권 차원의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사드 배치를 요구하게 되었다.⁴⁹⁾ 언론에서도 사드가 중국의 군사활동을 탐지한다든가, 사드가 배치되면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오해이고, 중국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이것을 빌미로 "한반도와 역내에 대한 미국의 입김을 차단하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한(對韓) 대북 관계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고도의 외교적 수사"라면서 오해 해소 차원의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다.⁵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야당의 사드 배치 지지발언을 비난하면서 철회를 주장하였듯이⁵¹⁾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상당할 정도로 달라졌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가진 2016년 1월 13일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문제를 제기하였고,⁵²⁾ 한민구 국방장관도 2015년 1월 25일 문화방송과의 대담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사드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으로써⁵³⁾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시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군과 협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의견이 2015년 2월에 비해서 12% 정도 증대되어 67.7%가 찬성하였다.⁵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2월 17일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이 사드 도입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지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간접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듯이 여전히 사드를 둘러싼 논란은 해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49) 이상배 외, "朴대통령發 '사드 배치론' 여야 급속 확산...정부 '경계'", 『연합뉴스』 (2016. 1. 14).

50) 윤상호, "'사드 위협론' 부풀린 중국", 『동아일보』 (2016. 1. 20), p. A3.

51) 정현, "'이석현 국회부의장, 사드배치 주장 우려;...안산시민단체 철회 촉구'", 『연합뉴스』 (2016. 1. 21), p. 7.

52) 안용현·이용수, "'사드(THAAD·美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검토'... 中이 가장 꺼리는 카드 빼든 朴대통령", 『조선일보』 (2016. 1. 14), p. A3.

53) 정용수, "'한민구 '군사 관점서 사드 배치 검토 필요'", 『중앙일보』 (2016. 1. 25), p. A1.

54) 강태화·조문규, "'20대 65%, 호남 59%..사드, 모든 연령·지역서 과반 찬성'", 『중앙일보』 (2016. 2. 15), p. A2.

2. 사드 논란의 쟁점

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ICBM을 요격 또는 탐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논리로 가장 먼저 제기된 내용은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발사하는 ICBM을 요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핵억제태세가 무력화되기 때문에 중국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에 무력충돌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한국은 그 사이에서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즉 “중국은 미국의 한국 내 MD 배치를 동북아의 화약고인 한반도에 미국이 위협한 인화물질을 갖다놓는 것으로 여긴다.... 미국 주도의 MD는 중국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⁵⁵⁾라는 주장이다. 『싸드(THAAD)』라는 소설에서는 “싸드는 전쟁의 연계선입니다. 중국은 한국부터 공격합니다. 바로 그 싸드를 없애려고 말입니다”⁵⁶⁾라는 말까지 등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드의 성능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초기에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채 확산되었다.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사드가 사용하고 있는 레이더의 위험성이 강조되었다. “사드와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 X-밴드 레이더는 유효 탐지 반경이 1000km에 달해 오산공군기지에 배치되면 중국 동부의 군사 활동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⁵⁷⁾ 이 주장은 중국인사들의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유포되었다. 즉 “중국의 국방 전문가는 ‘주한미군이 1000km 이상 감시할 수 있는 사드 레이더 방향을 중국 쪽으로 틀면 핵심 전력인 베이징 군구(軍區)와 선양 군구가 미군의 손바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는 식이었다.⁵⁸⁾ 어떤 신문에서는 “사드의 탐지장비인 X-밴드 레이더는 반경 4000~5000km 밖의 작은 물체도 식별하는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대부분 군사시설을 들여다보게 돼 중국이 경계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하였다.⁵⁹⁾

다만, 이러한 논리들은 초기에는 상당한 확실성을 갖고 보도되다가 시간이 흐르면

55) 정육식, “한국의 MD 편입은 ‘도자기 가게에서 쿵후 하는 격’,” 『프레시안』 (2014. 6. 2).

56) 김진명(2014), p. 344.

57) 정육식, “주한미군 사드는 괜찮다고? 제정신인가?,” 『프레시안』 (2014. 6. 20).

58) 안용현, “‘투키디데스 함정’과 사드(THAAD),” 『조선일보』 (2014. 10. 20), p. A31.

59) 인터넷 『경향신문』 (2014. 9. 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61109231&code=910302(검색일: 2015. 1. 16).

서 그렇지 않은 것이 드러나자 점점 줄어들었다. 이러한 논리의 강도가 약해지는 정도를 몇 가지 사건별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신문을 비교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주요 계기별 사드에 관한 기사

논란의 계기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스캐퍼로티 사령관 언급 (2014년 6월 4일)	“사드 미사일이 주한 미군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사드 미사일의 핵심 장비인 AN/TPY-2 지상 배치 X밴드 레이더는 최대 탐지 거리가 1800km에 달해 서해안 지역에 배치될 경우 중국이 미국을 위협하는 전략 무기인 IC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의 발사를 일찌감치 탐지할 수 있다.”(2014/06/04, p. A6)	특히 사드의 한국 배치는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어서 한-중 관계에도 악영향이 예상된다....군 당국자는 '사드와 연동돼 운영되는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1000km 이상이어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동부 연안의 핵심 지역이 탐지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14/06/04, p. 21)
워크 부장관 언급 (2014년 10월 1일)	“워크 부장관도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를 미국 MD체계의 일부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알고 있다. 하지만 사드는 전략적인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니라고 양국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2014/10/01, p. A1)	"사드가 미국 미사일방어 체계의 핵심 장비이며 중국·러시아가 주된 상대임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사드는 중국 주요 지역을 탐지할 수 있는 엑스(X)밴드 레이더와 연동하며, 미국은 이전에도 이 레이더를 우리나라에 설치하려고 애썼다는 게 정설이다."(2014/10/02, p. 31)
중국 국방부장 방한 (2015년 2월 5일)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장관)은...미국의 고고도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사드(THAAD)'의 주한 미군 배치에 우려를 표명했다....중국은 그동안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중국군 수뇌부가 우리 군 수뇌부에게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2015/02/05, p. A6)	"창완취안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 미사일방어(MD)의 핵심체계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드는 애초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중국 쪽에서 먼저 제기했다”고 말했다.”(2015/02/05, p. 06)
케리 미 국방장관 방한 (2015년 5월 19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美) 국무장관은 18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북한 위협과 관련)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병력·함정 배치 등)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차관보급 인사가 사드 관련 발언을 한 적은 있었지만, 케리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2015/05/19, p. A1)	케리 장관은 기자회견 뒤 서울 용산 주한 미군 기지에서 미군 장병들을 만나,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말했다.(2015/05/19, p. 01)

나. 사드 배치에 관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 및 탐지한다는 주장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강조되기 시작한 반대 논리는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이다. “사드는 2조원짜리 '고고도 머니게임'이라는 말이 회자되었고,⁶⁰⁾ “막대한 비용도 골칫거리다. 사드 포대당 비용은 2조 원이고, 수백 명에 이르는 운용 인력에 장비 수송과 유지·관리까지 고려하면 총비용이 4조~6조 원에 달한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북핵에 대비하는 ‘긴급소요’ 항목으로 상정해 방위비 분담금에 비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⁶¹⁾는 등의 보도도 있었다.

사드 배치에 관한 비용 문제는 미군의 사드 배치라는 원래의 사안을 한국의 사드 구매와 혼동되도록 만들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 당의 경우 2015년 4월 1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드의 “도입”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공론화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으나 “도입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는 것이 회의결과라고 보도되었다.⁶²⁾ 이와 같이 국민들 중에는 미군의 사드 배치와 한국군의 사드 구매를 혼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고, 이것이 잘못되었기에 주요일간지의 사설에서 “현재의 사드 논의는 1차적으로 주한미군에 들여오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다. 한국군의 사드 도입 여부는 별개 사안이다”는 점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⁶³⁾

국방부와 보수인사들이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지만, 언론이나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없었다.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미군이 여러 장비를 (한국에) 들여와도 우리는 돈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사드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말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사드, 공짜는 없어... 주한미군용 배치해도 비용 청구할듯”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 그 예다.⁶⁴⁾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조선일보』에서조차 “한·미 간에는 보통 얘기를 먼저 꺼내는 쪽이 비용을 부담토록 돼 있어 우리 측은 먼저 사드 배치 얘기를 꺼내지 않고 미측의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60) 정용수, “사드는 2조원짜리 '고고도 머니게임,’” 『중앙일보』 (2015. 3. 18), p. A8.

61) 신보영, “韓·美, 배치 필요성엔 공감...‘방식·부지·비용’ 조율 관건,” 『문화일보』 (2013. 5. 18), p. 3.

62) 조의준, “사드 공론화 결론 못 내린 輿의총,” 『조선일보』 (2014. 4. 2), p. A5.

63) 『조선일보』 (2014. 5. 20), p. A31.

64) 윤상호, “사드, 공짜는 없어... 주한미군용 배치해도 비용 청구할 듯,” 『동아일보』 (2015. 3. 20), p. A4.

다....사드를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측이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구매 비용 자체를 우리 측에 요구할 수는 없지만 운용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 형태로 우리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⁶⁵⁾라는 식으로 의혹의 여지를 남겨두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고, <표 2>에서 제시되고 있듯이 보수적인 성향임에도 비용에 관한 사항을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표 2〉 사드의 비용에 관한 『조선일보』의 언급

논란의 계기	언급 내용과 날짜
스캐퍼로티사령관 언급(2014/06/04)	1개 포대 2조원(2014/06/04, A6; 2014/06/19, A6)
중국 국방부장 방한(2015/02/05)	- 우리 예산구매는 반대, 주한미군 배치는 찬성 (2015/03/18, A5) - 1개 포대 가격 1.5조 - 2조(2015/03/25, A5)
케리 미 국방장관 방한(2015/05/19)	- 시설 및 운용비용 방위비분담금 사용(2015/04/18, A5)

65) 유용원·윤정호, “美 ” 한반도에 사드 영구배치 고려 ” ... 公論化 임박 美, 사드 비용 부담 압박... 한국 정부는 ‘3 NO(美요청·협의·배치계획 없다)’, 『조선일보』 (2015. 5. 21), p. A1.

IV. 사드관련 쟁점의 루머 여부 분석

1. 사드 관련 쟁점의 진실 여부

가.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ICBM을 요격 또는 탐지

그 동안의 논란을 통하여 드러났듯이 사드가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사드는 해외 배치된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 육군이 개발한 무기로서 “비행 최종 또는 종말단계”(final, or terminal phase of flight)에서 타격하는 요격미사일이라서⁶⁶⁾ 자신을 공격해오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있지만 다른 목표를 향하여 비행해 나가는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 또한 사드의 사거리는 200km이고, 고도는 150km 정도에 불과한데, 중국이 미국을 향하여 발사한 ICBM의 고도는 대부분 1,000km 이상이기 때문에 사드 요격미사일의 사거리를 초과한다.⁶⁷⁾ 더욱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ICBM은 모두 내륙에 배치되어 있는 데, 이것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상공을 경유하지 한국 상공을 경유하지 않는다.⁶⁸⁾ 즉 사드는 미국이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될 수 없다.⁶⁹⁾

사드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X-Band 레이더의 경우에도 1,000km 정도의 범위를 담당하지만,⁷⁰⁾ 통상적인 운용범위는 600여 km이다.⁷¹⁾ 이것은 상대방 미사일의 발사 여부를 탐지하는 용도가 아니라 인공위성 등으로부터 발사정보를 받아 ‘추적’하는 용도이고, 탐지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다.⁷²⁾ 설령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지구곡률(地球曲率)로 인하여 1,000km 거리에서는 60km 이상, 1,800km 거리일 경우 190km 이상에 있는 표적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레이더는 영상이 아니라 점

66) U.S. Missile Defense Agency. <http://www.mda.mil/system/thaad.html> (검색일: 2016. 1. 15)

67) 신영순, “THAAD 레이더 논쟁의 허구”, 『국가안보전략』, 16권 6호 (2015. 6), pp. 28-30.

68) 신영순, “THAAD 논쟁에 얽힌 허와 실”, 『국가안보전략』, 통권 30호 (2014. 12), p. 27.

69) Ibid.

70) 신영순, op. cit., (2015. 6), pp. 28-30.

71) 유용원, “北권역만 탐지... 사드(THAAD·高고도 요격미사일) 배치 검토”, 『조선일보』 (2015. 2. 24), p. A1.

72) Ibid.

으로 나타난 물체의 정보를 해석하여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다른 군사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⁷³⁾ 2014년 11월 21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 중국 북경대학의 후아한 교수도 “사드 자체는 중국의 억제태세에 위협이 아니다”(THAAD per se is not a threat to China’s deterrence)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⁷⁴⁾

그렇다면 중국 지도부는 왜 사드에 대하여 그와 같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 이들도 한국에서 처음에 거론되던 과장된 사드의 위력을 그대로 믿었을 수 있다. 시진핑과 박근혜의 회담이 2014년 7월이었는데, 그 당시는 한국에서 사드의 성능에 대한 과장이 컸던 시기이다. 2014년 11월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도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의 사정거리가 2000km라서...”라고 하여 10배나 틀린 사거리를 열거한 바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관리들이나 학자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하여 반대하면서도 그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중국의 반대가 근거가 없기에 중국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구실로 사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하였다.⁷⁵⁾

나. 사드에 관한 비용을 한국이 부담

사드에 관한 논란에서 국민정서를 자극한 것은 그에 관한 비용인데,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미군이 자신의 보호를 위하여 한반도에 배치하는 무기체계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합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러한 전례가 없으며, 미군의 요청도 없었고, 국제적 관례로도 그러한 적이 전혀 없다. 2015년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직후 미군이 글로벌 호크, P-8 대잠초계기, F-35 스텔스 항공기, 양륙함, 이지스함 등의 첨단무기를 일본에 배치하기로 하였지만, 그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지는 않는다.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하여 미군은 현재 PAC-3 2개 대대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있지만, 그 비용을 한국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한국도 지

73) Ibid.

74) 2014년 11월 21일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한중협력 과제와 방향’(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배포된 별도의 슬라이드 자료.

75) 우정엽, “사드(THAAD)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 JPI Peacenet, 제주평화연구원, http://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id=5377&code=papermorgue&scode=&ref=5377 (검색일: 2016년 1월 16일); 이상현, “사드 한반도 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p. 3

불한 적이 없다. 현재 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하는 사드 포대는 이미 미군이 구입하여 텍사스에 배치해둔 것을 한반도로 재배치하는 것으로서, 비용은 이미 지불된 상태이다.

일부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아니라 한국의 사드 “도입”이나 “구매”로 혼동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번 사안은 분명히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본국에 구매해놓은 사드 중 1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해줄도록 건의함으로써 비롯된 것이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관리들도 한국이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사드 배치를 허용하지 말라고 요구하였지, 한국에게 사드 도입을 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도입이나 구매를 언급한 적이 없고, 『2014년 국방백서』를 통하여 발표한 한국군 탄도미사일 방어의 체계도에도 사드는 없다. 그에 해당하는 장거리 요격미사일은 2020년대 중반까지 자체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⁷⁶⁾

사드 배치로 인하여 한국의 방위비분담이라도 증대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지불하는 방위비분담은 2014년 4월에 타결된 것으로, 2014년에는 9,200억원을 지불하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증대시키기로 되어 있다. 2019년부터는 새로 조건을 협상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듯이 5년 단위로 협상한다. 한 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면 미국의 방위비분담이 증대될 것이라는 루머가 제기되었지만,⁷⁷⁾ 그의 연기가 결정된 2010년이나 2014년을 전후하여 방위비분담이 증대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미 간의 어떤 특별한 사건으로 인하여 방위비분담금이 증대 및 감소된 사례가 없다. 방위비분담은 대체적으로 주한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40%, 미군 및 한미연합 군사시설 건설비 40%, 수송 등의 군수비용 20% 등으로 항목별로 지출할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과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어떤 장비의 도입비나 운영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가 없다.

76)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p. 59.

77) 정용수, “전작권 환수, 한국군 능력 평가해 결정”, 『중앙일보』 (2014. 9. 19), p. A1; 김외현, “전작권 전환 재연기, 뭐가 문제인가”, 『한겨레』 (2014. 11. 12), p. A8.

2. 사드 배치 관련 루머의 유포에 관한 분석

사드 배치를 둘러싼 루머의 유포자들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 미 MD 참여”라고 주장했던 집단이다. 이들은 미국의 MD는 제국주의와 중국 포위 의도라고 주장하였다. 사드는 미 MD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따라서 그 배치를 한국이 허용하는 것은 미 MD 가입이고, 따라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것은 자주를 중시하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김진명의 소설도 사드 관련 루머의 유포에 기여하였다. 김진명은 1993년『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로 450만부를 판매함으로써 민족적 소설가로 인정을 받은 명성으로『싸드(THAAD)』라는 소설을 썼고, 이것은 출판 2주 만에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는 등 관심을 끌었다. 김진명은 당시에 유포되었던 루머의 논리를 소설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사드는 미국 MD의 핵심요소로서 한반도에 배치 되면 중국의 ICBM을 모조리 추적 및 요격할 수 있어서 무용지물로 만들며, 평택기지도 사드 배치를 위하여 건설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루머의 확산에는 자극적인 기사를 선호하는 언론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사드의 탐지거리가 3,000km 이상이라거나⁷⁸⁾ 4조 규모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⁷⁹⁾ 등의 과장된 내용들이 검증없이 실렸고, ‘신문’이라는 공신력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졌다. 이들은 미국이나 중국의 주요인사들이 방문한다는 계획만 제시되면 사드가 논의될 것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논란을 부추겼다. 예를 들면, 2015년 4월 9일과 10일 사이에 방한한 카터 미 국방장관은 사드에 관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전후에 한국 언론에서는 <표 3>과 같은 타이틀로 다양한 추측성 기사를 게재하였다.

78) 박현, “사드, 중국발 미사일 3000km 이상 탐지...중국에 위협”, 『한겨레』 (2015. 6. 1), p. A1.

79) 박병수, “사드 2개 포대 배치면 최대 4조...한국형MD와 중복”, 『한겨레』 (2015. 4. 8), p. A5.

〈표 3〉 카터 미 국방장관 방한 시 주요 언론의 사드 관련 기사 제목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한겨레
- 韓美 내달 국방 고위급 회의... 사드 배치(THAAD·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 논의 가능성 '전략적 모호성' 유지 어려울듯... 軍 "공식 의제에는 포함 안돼" (2015/03/19, A1)	- 미 국무부 차관보 "사드는 북 미사일 막을 결정적전력" (2015/04-09, 08).	- 부지 실사 뒤 카터 방한... 美 '사드' 공식 제기하나(2015/03/12, 6). - 韓도 美도 먼저 정식 제안 않는 사드... '비용' 부담 때문? (2015/04/03, 3). - '사드' 공식의제 아니지만... '4D작전계획' 매개로 우회협의 (2015/04/10, 5).	- 미·중 이번엔 장관급들 방한... 한국 '사드 외교' 다시 시험대 (2015/03/19, 4). 미 국방장관 "사드 배치 논의 시점 아니다" (2015/04/11, 8).

중국관리들이나 학자들의 간접적 발언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루머의 확산을 부추겼다. 한국의 반대 논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은 한국 관리나 학자들을 만날 때마다 사드 배치에 대한 그들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것은 강대국의 권위에 힘입어 기존 루머의 설득력을 강화시켰다. 국방부 또한 최초부터 “한국의 미사일 방어 = 미 MD 참여”라는 루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고,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쳤다. 정부에서도 “중국의 민감한 반응으로 경제적·외교적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거나 제시하지 못하였다.⁸⁰⁾ 즉 사드 배치에 관한 루머에서는 차단자보다는 유포자나 방관자가 많았고, 따라서 지속적으로 확산되었다.

3. 사드 배치 관련 확산 편향

사드는 무기체계라서 요격이나 탐지거리 등의 성능이 정해져 있고, 한 때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정되는 것이 정상이다. 시각이나 입장에 따라서 사드의 성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이 그 반대였던 것

80) 이상현, “사드 한반도 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p. 2.

은 확증편향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논점이 계속적으로 변화해온 것은 확증편향의 명백한 증세이다. 처음에는 사드가 중국의 ICBM을 요격하기 때문에 배치를 불허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레이더가 중국의 모든 군사활동을 탐지할 수 있다는 새로운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것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대규모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이것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자 방위비분담이 증대될 것이라는 추측까지 제기하였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이번에는 최초의 의혹을 부정하는 내용임에도 사드의 성능이 미흡하여 배치해도 효과가 없다는 점까지 제기하였다. 즉 “사드 생산 주업체인 록히드마틴은 실험 성공률이 100%에 육박한다고 자랑하지만, 그 면면을 보면 '글썸'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실전에 가까운 상태에선 한 번도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다”⁸¹⁾ 등의 의혹 제기이다. 주요 일간지에서도 미국의 보고서를 참고하거나 전직관리들과의 인터뷰를 근거로 사드의 성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⁸²⁾

또한 최근에는 100미터 이내에만 접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고,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괌(Guam)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는데도⁸³⁾ 사드 레이더에서 엄청난 전자파가 방출되어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비상식적인 루머도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사드 배치 예정지역으로 언론에서 추측한 곳에서는 배치 반대 운동까지 발생하는 지경이다. 사드 배치에 관하여 부정적인 루머를 들은 사람에게는 전자파에 대한 괴담도 매우 신뢰성 있게 들리고, 그것을 알기에 루머 유포자들은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여 국민들의 확증편향을 강화시킨 것이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까지 실시하였다고 발표하자 야당의 일부까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도 있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은 사드 배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고, 최근에는 전자파 유해라는 괴담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

81) 정육식,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니, 사드 도입?”, 『프레시안』 (2015. 3. 10).

82) 박병수, “사드 2개 포대 배치 땀 최대 4조...한국형MD와 중복,” p. 05; 박현, “미 전직 고위관리 ‘사드, 북 미사일 요격 어렵다’ 인정”, 『한겨레신문』 (2015. 7. 6), p. 01.

83) 국방부, “THAAD 관련 참고자료”, 비공개자료 (2016년 2월).

드에 관한 확증편향은 심각한 상황이다. 탄도미사일 방어와 순항미사일 방어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가 BMD라는 약어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한국 언론에서는 굳이 'MD'로 바꿔서 보도하고, '미사일방어'라는 쉬운 단어를 굳이 'MD'라는 약어를 괄호로 표시하는 것에서 봐도 확증편향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강화되면 될수록 그에 대한 방어력의 증강은 필요하고, 당연히 사드 배치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야할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은 확증편향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V. 결론 및 함의

공격해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상층방어용 무기인 사드를 주한미군이 자체 생존성 향상을 위하여 배치하려는 사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다양한 내용의 루머가 유포되었다. 이것은 일시적인 루머에 그치지 않은 채 확증편향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깊게 각인되었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책결정과 국제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ICBM을 요격 또는 탐지할 수 있다거나 사드도입에 따른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거나 사드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사드의 레이더에서 엄청난 전자파가 나온다는 말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루머와 확증편향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논의방향을 혼란시키고, 국제관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개된 논란은 루머와 확증편향의 산물이라는 것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일이다. 그래야 시정이나 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안함 폭침을 둘러싼 루머에서 교훈을 얻어서 시정 노력을 경주했더라면 사드 배치를 둘러싼 이번의 논란이 이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언론, 국민 모두가 반성의 차원에서 루머와 확증편향의 악영향을 인정하고,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예를 들면, 사드에 관한 루머와 확증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사드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고, 일부 인사들이 의혹을 제기할 경우 당국자

로 하여금 즉각적이면서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 역시 확증편향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드에 관한 제반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한 후 기사화함으로써 루머를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들도 루머와 확증편향의 해악을 이해하는 가운데 사실에 근거하여 제반 내용을 이해하고자 해야 할 것이고, 지식인들은 관련 사항을 심층깊게 연구하여 적시에 발표함으로써 요구되는 해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드는 물론이고 다른 모든 안보 및 국방사안에 적용함으로써 이후부터는 루머나 확증편향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루머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진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기승을 부리거나 확증편향의 형태로 신념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⁸⁴⁾

사드 배치와 관련한 루머가 기승을 부린 데는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방어개념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원인도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함과 동시에 한국은 필요한 방어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여야 했고,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후에는 당연히 그러한 노력이 가속화되어야 했었다. 핵무기가 개발되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하는 것은 자명한 귀결이기 때문이다. 최초로 한국군이 탄도미사일 방어의 개념을 잘못 정리하여 하층방어만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미군의 사드 배치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전개된 점도 있다. 한국과 유사하게 북한의 핵미사일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은 현재 PAC-3 17개 포대, SM-3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 4척, 자체 개발한 FPS-3와 FPS-5 레이더와 미국의 X-밴드 레이더도 2식(式, 시스템의 단위)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SM-3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함 4척을 추가하며,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여온 요격고도 500km의 SM-3 Block IIA도 2017년까지 완성하여 2018년경에는 군부대가 인계받는 다는 계획으로 탄도미사일 방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⁸⁵⁾ 비록 늦었지만 한국도 이론에 맞추어 중첩방어를 기반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방어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일정과 계획을 구체화하며,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무기 및 장비를 조기에 획득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

84) Nicholas DiFonzo and Prashant Bordia, *Rumor Psychology: Social Organizational Approaches* (2006), 신영환 역, 『루머심리학』 (서울: 한국산업훈련소, 2008), p. 304.

85)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15* (Tokyo: MoD, 2015), pp. 229-231.

적인 대책을 구비해 나가야할 것이다.

이 기회에 한중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이지만,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사태는 물론이고, 한국이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중국이 관계에 걸 맞는 협력을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진정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면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 도모하든지 아니면 사드를 비롯한 한국의 모든 방어노력을 오히려 지원해야할 것이다. 동시에 사드를 둘러싼 논란의 상당부분은 한국이 중국의 입장을 지레 짐작하거나 과도하게 해석하여 자증지란을 보이고 있는 측면도 있다. 한국은 중국의 반대가 두려워 ‘전략적 모호성’ 아래 숨지 말고, 정치적 코스트가 있다면 감당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⁸⁶⁾

86) 이상현, “사드 한반도 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정세와 정책』 (2015년 5월), p. 4.

<Abstract>

An analysis on Rumors and Confirmation Biases Regarding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AAD Systems

Park, Hwee Rhak

Associate Professor in Kookmin University

This paper was written to analyze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AAD systems by the USFK (U.S. Forces in Korea) applying theories of rumor and confirmation bias. It used reports of the South Korean newspapers as sources for analyses. It found out that the arguments that were raised against the deployment of the THAAD systems were started by rumors and strengthened by confirmation biases.

South Korea should recognize the serious side effects of rumors especially on national security issues such as this controversy and try not to repeat the same mistakes in the future. It should develop a more appropriate concept for its ballistic missile defense and enhance actual capabilities of the defense through the close cooperation with the U.S including the deployment of the THAAD. Most of all, South Korea should do its best to strengthen its alliance with the U.S., while recognizing the limitation of its security cooperation or strategic partnership with China as a lesson of this THAAD controversy.

Key Words: THAAD, Missile Defense, MD, BMD, Rumor, Confirmation Bias,
ROK-US Alliance

〈참고문헌〉

-문헌-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 _____, 『국방개혁 307계획 보도 참고자료』, 서울: 국방부, 2011.
- _____, 『2010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0.
- _____, “THAAD 관련 참고자료”, 비공개자료 (2016년 2월).
- 권세정·차미영, “빅데이터 기반 루머의 특성 및 분류”, 『정보과학처리학회지』, 제21권 3호 (2014. 5). p. 46.
- 김진명, 『싸드(THAAD)』, 서울: 새움, 2014.
- 신영순, “THAAD 논쟁에 얽힌 허와 실”, 『국가안보전략』. 통권 30호 (2014. 12).
- _____, “THAAD 레이더 논쟁의 허구”, 『국가안보전략』. 16권 6호 (2015. 6).
- 우정엽, “사드(THAAD)가 중국에게 위협이 되는가?” JPI Peacenet (제주평화연구원)
http://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id=5377&code=papermorgue&scode=&ref=5377(검색일: 2015년 2. 16).
- 이상현, “사드 한반도 배치, 어떻게 볼 것인가?”, 『정세와 정책』(2015년 5월).
- 이상훈,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주변국 인식”, 『군사논단』, 통권 제46호 (2006), pp. 142-157.
- 이양구, “사후과잉확신편향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통권 17호 (2010).
- 이예경, “확증편향 극복을 위한 비판적 사고 중심 교육의 원리 탐구”, 『교육과학연구』, 제43권 4호 (2012).
- 장혜지·조수영, “악성루머에 대한 사회적 동조. 대응방법, 루머이력이 기업평가 및 루머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7권 4호(2013), pp. 96-123.
- 차유리·나은영, “국내 인터넷 루머커뮤니케이션 유력자 현황에 대한 탐색:동기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8권 4호 (2014. 8), pp. 312-340.
- 최 영, “인터넷상에서의 루머 확산 저지에 관한 연구: 시민들의 자발적 대응효과

- 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연구』, 제18권 3호(2010), pp. 77-100.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국 MD에 참여 규탄 기자회견문』(2008. 3. 20).
- 한정석, “인터넷괴담과 사실왜곡의 현상과 분석”, CFE Report No. 148 (2013. 3. 10).
- 홍규덕,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 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시아』, 제22권 4호(2015), pp. 110-134.
- 홍주현·윤해진, “트위터를 통한 루머의 확산 과정 연구: 한미 FTA 관련 루머의 자극성에 따른 의견 확산 추이와 이용자의 상호작용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6호(2014), pp. 59-86.
- Allen, Kenneth W. et al., *Theater Missile Defenses in the Asia-Pacific Region*. Working Group Report. No. 34. Washington D.C.: The Henry L. Stimson Center, June 2000.
- DiFonzo Nicholas and Bordia, Prashant, *Rumor and Psychology: Social Organizational Approaches, 2006*. 신영환 역, 『루머심리학』, (서울: 한국산업훈련소, 2008).
- Harsin, Jayson. “The Rumour Bomb: Theorising the Convergence of New and Old Trends in Mediated US Politics.” *Southern Review: Communication, Politics & Culture*. Vol. 39.
- Ministry of Defense, *Defense of Japan 2015*. Tokyo: MoD, 2015.
- Nekovee, M. et al, "Theory of rumor spreading in complex social networks." *Physica A* (July 9, 2008). http://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22819843_Theory_of_rumour_spreading_in_complex_social_networks(검색일: 2016. 1. 24).

-언론기사-

- 강태화·조문규, “20대 65%, 호남 59%..사드, 모든 연령·지역서 과반 찬성”, 『중앙일보』(2016. 2. 15).
- 김외현, “전작권 전환 재연기, 뭐가 문제인가”, 『한겨레』(2014. 11. 12).

- 박병수, “사드 2개 포대 배치면 최대 4조...한국형MD와 중복”, 『한겨레』(2015. 4. 8).
- 박 현, “미 전직 고위관리 ‘사드, 북 미사일 요격 어렵다’ 인정”, 『한겨레신문』(2015. 7. 6).
- _____, “사드. 중국발 미사일 3000km 이상 탐지...중국에 위협”, 『한겨레』(2015. 6. 1).
- 신보영, “韓·美. 배치 필요성엔 공감...‘방식·부지·비용’ 조율 관건”, 『문화일보』(2013. 5. 18).
- 안용현, “투키디데스 함정'과 사드(THAAD)”, 『조선일보』(2014. 10. 20).
- 안용현·이용수, “사드(THAAD·美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검토'... 中이 가장 꺼리는 카드 빼든朴대통령”, 『조선일보』(2016. 1. 14).
- 양승식, “케리 美국무. 사드 한국 배치 필요성 언급, ‘北 도발적... 모든 것에 대비해야.’”, 『조선일보』(2015년 5월 19일).
- _____, “통합 미사일 방어망... 韓美 합참의장 논의, 내달 美국방 방한땀 '사드' 제기 가능성”, 『조선일보』(2015년 3월 28일).
- 유용원, “北권역만 탐지... 사드(THAAD·高고도 요격미사일) 배치 검토”, 『조선일보』(2015. 2. 24).
- _____, “주한미군 '사드(THAAD·高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추진... 中 반발 예상”, 『조선일보』(2014. 6. 4).
- _____, “中國방 " 주한미군에 '사드(美 高고도 요격미사일)' 배치 우려”, 『조선일보』(2015년 2월 5일).
- 유용원·윤정호, “美 " 한반도에 사드 영구배치 고려 " ... 公論化 임박 美. 사드 비용 부담 압박... 한국 정부는 '3 NO(美요청·협의·배치계획 없다)”, 『조선일보』(2015. 5. 21).
- 유용원·최재혁, “美국방 " 사드(高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생산단계... 배치 논의할 때 아니다”, 『조선일보』(2015. 4. 11).
- 윤상호, “사드 위협론' 부풀린 중국”, 『동아일보』(2016. 1. 20).
- _____, “사드, 공짜는 없어... 주한미군용 배치해도 비용 청구할 듯”, 『동아일보』(2015. 3. 20).
- 윤정호, “美 ‘아태지역 MD(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한국 참여 압박”, 『조선일

- 보』(2014. 5. 30).
- 윤정호, “美 국방부장관 " THAAD(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포대 한국배치 검토 ”, 『조선일보』(2014. 10. 1).
- 이상배 외, “朴대통령發 '사드 배치론' 여야 급속 확산...정부 '경계”, 『연합뉴스』(2016. 1. 14).
- 이용수, “中 ‘韓 사드(THAAD·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우려’ 공개적 압박”, 『조선일보』(2015. 3. 17).
- 추인영, “대북인권결의안 및 사드 한국배치 '반대”, 『뉴시스』(2014. 11. 26).
- 전현석, “金국방 ‘분명히 美 MD에 참여 안해”, 『조선일보』(2013. 10. 17).
- 정용수, “사드는 2조원짜리 '고고도 머니게임”, 『중앙일보』(2015. 3. 18).
- _____, “전략권 환수, 한국군 능력 평가해 결정”, 『중앙일보』(2014. 9. 19).
- _____, “한민구 ‘군사 관점서 사드 배치 검토 필요’, 『중앙일보』(2016. 1. 25)..
- 정육식,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니, 사드 도입?”, 『프레시안』(2015. 3. 10).
- _____, “한국의 MD 편입은 ‘도자기 가게에서 쿵후 하는 격”, 『프레시안』(2014. 6. 2).
- _____, “주한미군 사드는 괜찮다고? 제정신인가?”, 『프레시안』(2014. 6. 20).
- 정육식, “한국의 MD 편입은 ‘도자기 가게에서 쿵후하는 격”, 『프레시안』(2014. 6. 2).
- 정운섭, “靑 사드 공론화에 부정적...‘3No’ 입장 재확인”, 『연합뉴스』(2014. 3. 11).
- 정 현, “이석현 국회부의장, 사드배치 주장 우려;...안산시민단체 철회 촉구”, 『연합뉴스』(2016. 1. 21).
- 조의준, “사드 공론화 결론 못 내린 輿의총”, 『조선일보』(2014. 4. 2).